

[세미나]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

- 일시: 2021년 1월 13일 (수) 오후 2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토론: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미 대선과 한반도 안보: 조화 및 갈등의 역사

- » 클린턴 - 김대중 : 햇볕정책 - 페리 프로세스, 대북 관여정책 전개
- » 김대중 - 부시 :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선회, 한미갈등
- » 부시 - 노무현 : 2차 북핵 위기 후 6자회담 개최, 한국 이라크 파병 동참
- » 부시 - 이명박 : 6자회담 실패, 북한의 연이은 도발
- » 이명박 - 오바마 : 전략적 인내 전개
- » 오바마 - 박근혜 : 대북 압박 정책 본격 전개 (유엔 안보리 결의 대폭 강화, 바이든 안보팀?)
- » 트럼프 - 문재인 : 탑다운 방식의 대북 협상 전개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1)

»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간 정책차이

후보	항목	내용
트럼프	외교	무차별 전쟁 종식과 파병 미군 귀환 동맹이 합당한 대가 지불하도록 할 것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증강 미국에 피해를 주는 테러리스트 소탕 출중한 사이버안보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중국	중국에 뺏긴 100만 개 일자리를 되찾을 것 중국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기업대상 세제혜택 부여 의약, 로봇기술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기업은 비용전액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조달 시장 참여 불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북한	Direct re-engagement approach. 재선 이후 착수
바이든	외교	우리 스스로의 민주주의와 동맹 복원이 우선 미국인들의 핵심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데 주력 전쟁 종식을 통해 국력을 생산적인 데 활용 외교력 강화와 파트너십 복원
	중국	라이벌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혁신적 강점 강화하고 민주진영 통합
	북한	다자외교 선호,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통한 비핵화 유도

자료: 메리츠증권, 전략공감 2.0, 2020.10.06.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2)

» 미중관계, 바이든 Foreign Affairs, 3/4월 2020

The United States does need to get tough with China. If China has its way, it will keep robbing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 companies of their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It will also keep using subsidies to give its state-owned enterprises an unfair advantage—and a leg up on dominating the technologies and industries of the future.

The most effective way to meet that challenge is to build a united front of U.S. **allies and partners to confront China's abusive behavio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ven as we seek to cooperate with Beijing on issues where our interests converge, such as climate change, nonproliferation, and global health security. On its own,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bout a quarter of global GDP. When we join **together with fellow democracies, our strength more than doubles. China can't** afford to ignore more than half the global economy. That gives us substantial leverage to shape the rules of the road on everything from the environment to labor, trade, technology, and transparency, so they continue to reflect democratic interests and values.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3)

» 북한문제, 바이든 Foreign Affairs, 3/4월 2020

Tehran must return 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deal. If it does so, I would rejoin the agreement and use our renewed commitment to diplomacy to work with our allies to **strengthen and extend it, while more effectively pushing back against Iran's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With North Korea,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and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I will also pursue an extension of the New START treaty, an anchor of strategic stabil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use that as a foundation for new arms control arrangements.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4)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5)

» 바이든의 대북 정책



- 실무회담의 성과 기반
- 합의 + 검증 수반
- 북한의 비핵화 조치
- 단계적 협상
- 미국: 북한 비핵화 의미
- 북한: 주한미군 철수 의미

북한의 반응: 8차 당대회



對南

비본질적
문제

- 코로나 방역
- 인도적 지원
- 관광협력

對美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미 행정부
불변

연합군사훈련
중단

책임 있는
핵강국

- 다탄두장거리미사일
- 핵잠수함
- 전술핵
- 극초음속발사체

핵보유 의도
핵군축협상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1) 불확실성

» 북한의 선택과 미북협상 전망

전략 도발

+

침묵

+

대화 의사
피력

- 제재 강화
- 미중관계가 역할 전망
- 대화 재개?

- 바이든 정부의 선관여 기대
- 시간표 문제 (문 정부 임기)
- 3월 이전 메시지 기대
- 없을 경우 3월 전략도발 예상

- 미국 스몰딜 의사 피력
- 북한 대화의사 화답
- 제3국 실무회담 재개 ('언제'가 문제)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2) 한미동맹 이슈

» 한미동맹



- 인도태평양 지속
- 한미일 안보협력강화
- 미사일 방어 강화
- 상반기 13% 내외 협상
- 주한미군은 단기 안정 정책 리뷰 후 문제 제기 전망
- FOC 연기 후 일관된 입장
- 임기 내 전환 제한 전망
- 차기 행정부와 논의 가능성

우리의 대응 방향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 지향

-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 남북간의 신뢰 제고와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평화 통일 지향

»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과의 관계 지속 발전
-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한 평화와 번영 기반 조성
- 유럽, 동남아, 서남아, 태평양 도서국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확대

-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기여 확대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도발 억제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 ◇ 최근 북한의 노동당대회 결과와 김정은의 대미-대남 메시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 등이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는 상황에서 자유기업원의 본 세미나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라 판단됨.
- ◇ 특히 발제자께서 역대 미 대선과 한반도 안보 간에 조화 및 갈등의 역사를 정리해 비교해 주신 부분에서 양 국가의 집권 정치 세력 간에 안보 이념의 조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 아울러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가운데 대북 정책이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실무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합의와 검증을 수반할 것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단계적 협상 논리로 미국과 비핵화 협의를 핵보유에 두고, 핵군축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됨.
- ◇ 또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공감됨.
- ◇ 여기에 토론자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큰 정부, 그린 딜, 증세’와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회에 관철되는 효과가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 이러한 바이드노믹스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시장에서 일탈시킴으로서 미국 경제의 호조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특히 실용주의자인 바이든의 태도가 미중 간에 경제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압박 노선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대중국 강경 안보 노선을 약화시키는 대신 교역 협력을 얻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멘텀이 한반도에서도 ‘남북경협’,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 ‘남북연방’이라는 지향점을 등장시키지 않을까 우려됨.

-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홀히 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바이든 정부와 공유하고 유엔 인권위에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가 지속적인 의제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당연히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미국의 민주당으로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전략적인 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